

東아시아의 人口와 人口政策*

朴商台

- | | |
|-------------------------|---------------|
| I. 人口政策이란 무엇인가? | |
| II. 轉換期를 맞은 東아시아** 人口政策 | |
| III. 研究資料 | IV. 人口增加와 增加率 |
| V. 出産力 | VI. 死亡力 |
| VII. 年齡 및 性構造 | VIII. 都市化 |
| IX. 人口와 發展 | X. 結 論 |

I. 人口政策이란 무엇인가?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그 사회의 존속과 번영, 즉 국민의 복지를 위해 현재의 인구동향을 변경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정부차원의 입법, 행정 등 모든 시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ESS, Vol. 12, p.381).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이라 하면 우선 인구증가율을 높이거나 유지 또는

*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1993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저하시키기 위한 시책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출생, 사망, 이동 등 변화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인구의 - 성, 연령, 산업, 직업, 지역 등에 따른 -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모든 공공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변동 자체는 인구의 추세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인구추세는 사회의 모든 과정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정책의 범위는 대단히 애매하다. 또한 인구정책의 범위를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인구정책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UN, 1973, p.634).

첫째, 인구정책을 수립했다는 행정당국자나 입법기관으로부터의 유권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는가?

둘째, 정책의 목표가 막연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 하나으로써 충분한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와 구체적인 기구나 제도가 확정되어야 하는가?

넷째, 정부의 명시적인 발표는 없더라도 개인·단체나 조직등이 인구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저지하려는

** 東아시아 지역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학자에 따라, 연구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는 東北亞와 東南亞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구분해 놓은 東아시아(한국·북한·중국·몽골·일본)와 東南亞에서 베트남을 포함시켰다. 베트남을 포함한 이유는 우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과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한국과의 교류와 국제 교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는 1981년 개소한 이래 15년간 중국·일본·몽골·베트남의 학자들과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심회에 걸쳐 학자들을 초청했고 또한 본 연구소에서도 학술회의 참가를 위해 방문단이 정기적으로 이들 여러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여 학술발표와 자료수집 및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했음을 밝혀 둔다.

노력을 할 경우 이것을 인구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예컨대 정부에서는 묵시적으로 피임을 권장하고 있을 때 종교단체나 다른 조직체에서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다섯째,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의 변화과정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나라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예컨대 정부에서 기혼부부의 피임을 권장하되 그 목표를 우생학적인 차원에서 인공유산 감소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는 데 두고 출생수의 감소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인구추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컨대 여성지위의 제고, 일반적인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도 인구정책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정책과 정책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예컨대, 국민보건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여성의 분만휴가,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를 건립하여 아동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유산과 피임을 허용하거나 장려할 때 이것을 출산억제정책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덟째,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해서 인구정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이것은 확정짓기 곤란하다. 정부는 비정부기관의 노력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이 전혀 없는 것도 정책 - 즉 放任主義 -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개관하기 보다는 인구의 구조와 출산력, 사망력 등 주요변수의 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過去可視的인 것 보다는 非可視的인 정책의 방향을 추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轉換期를 맞은 東아시아 人口政策

동아시아는 각국은 인구변천과정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장 고도로 발전된 인구변천과정을 보여 주는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한국·대만·홍콩등은 변천과정을 앞서가는 나라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북한·중국 등의 나라가 바짝 뒤쫓고 있다. 또한 몽골과 베트남을 대표로 하는 동남아 여러나라들은 초기 변천과정에 진입해 있다.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인구정책은 인구변천과정의 차이와 함께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정치적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다. 출산력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피임은 물론 授乳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 반면 “세 자녀 이상 낳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싱가포르등의 국가도 있다 (APPJ, Vol 10, No.4, Dec, 1995).

한국의 인구정책은 1995-96년 기간 중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 출산율의 억제나 특정지역에로의 집중억제에 두어졌던 정책목표가 인구구조의 개선과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등으로 옮겨짐으로써 과거의 소극적인 인구정책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시행해 오던 3자녀에 대한 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이나 불임시술자에 대한 공공주택임주 우선권 보장등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韓國經濟新聞, 1996. 1. 19, 39쪽)

또한 한국정부는 신생아의 남녀비율이 균형을 잃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딸 두명 이상을 낳을 경우 혜택을 주는 여아출산 장려정책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996년 1월 27일 밝힌 바에 의하면 두명 이상 여아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까지도 지급할 예정이다 (朝鮮日報, 1996. 1. 28, 2쪽).

한국을 제외한 연구대상 국가는 모두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이거

나 변형된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실패하고 국가가 붕괴했다고 해서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이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Thomas More의 Utopia (1516)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강한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하였으며 이들이 주장한 사회개혁과 사회재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Utopian Socialism이라 부른다. 19세기 초까지 사회주의 저술가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계급이 급격하게 분화되고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생활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세기 중반 사회주의를 집대성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구이론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유물사관적인 큰 맥락에서 인구와 사회경제적 상관관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구성했다. 그들은 18세기 말에 나온 맬더스의 인구론을 추상적인 공론으로 보고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구의 법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여러가지의 수정된 이론들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학자들은 생산양식의 변화 특히 생산관계의 변화가 인구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문제를 없앨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인구는 사회경제제도의 변화, 즉 생산관계의 변화여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사회주의 이론의 맹점은 변증법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사회적 모순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회적 모순의 일부가 기존의 인구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III. 研究資料

최근에 이률수목 인구에 대한 지수는 국력을 측정하고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US News and World Report紙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94년까지 40년간 전세계에서 일어난 국가위기 상황 113건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있는 변수 600여개를 추출한 것 중 영유아사망율이 가장 의미있는 지표인 것으로 꼽혔다 (朝鮮日報, 1996. 2. 6자, 8면). 이는 영아사망율이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영아사망율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영아사망율의 선천적 요인의 감소는 지난 수십년간 지극히 미미했다. 이것은 선천적 요인의 통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아사망율의 후천적인 요인의 감소가 영아사망율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사망율은 전쟁, 기근, 역질 등 비선천적인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지수가 국가붕괴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같이 중요한 인구의 자료는 국가에 따라 그 완전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시점이나 기관과 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UN ESCAP의 자료와 UNDP의 자료를 주로 이용했다. 본 연구의 대상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베트남으로 하고 일본은 참고로 비교를 위한 나라로 넣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동아시아 주요국가 중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가장 높은 완전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인구자료는 최근에 이르러 대단히 높은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대상인 중국, 몽고, 베트남과 북한의 인구자료는 대단히 불완전하다. 위의 네 나라 가운데 중국은 1978년 개방 이래 그 자료가 비교적 많이 알려졌으나 워낙 인구수와 지역이 광대하고 완전성에 있

어 지역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적인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형편이다. 몽골은 인구수가 적은 반면 광대한 지역에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어 완전성에 문제가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구조와 변화과정에 대한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도 1988년 도이모이(刷新)정책을 표방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인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오직 북한만 1980년대까지 인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일부 자료를 미국학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요즘 널리 인용되게 되었고 추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Eberstadt, 1990).

북한이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를 교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전까지 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가지로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자료공개를 기피한 것이 비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거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정확한 센서스 업무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필자는 그와 더불어 의도적인 면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인구의 지역별·성별·연령별 구조가 발표되는 경우 군사기밀과 노동력 배치 등이 노출되므로 안보상의 이점을 위한 것이 주요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에 이용하기 위한 것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자료요구에 따른 인구자료의 공개가 가치있는 정보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북한의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동구·소련의 예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위와같은 이점은 국제적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에따라 점점 고립된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문제와 고도의 분석기술의 이용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자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상황과 비공개가 가져오는 이점이 불리

한 점에 비해 미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자료공개와 지속적인 자료제공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북한의 인구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오지 않은 결과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인구에 관한 뉴스 중 북한에 관한 것은 매우 희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년간 UN ESCAP에서는 인구에 관한 논문만을 수록한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을 발간했다. 1986년 3월 제 1권 1호로 시작하여 95년 12월 제 10권 4호까지 총 40권에 수록된 160여편의 인구관계 논문 중 북한에 관한 논문은 단 한편으로서 그것도 남북한을 합친 1945년 이전의 출산력 추계에 대한 것 뿐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39편, 한국 17편, 일본 10편, 홍콩 9편, 베트남 6편, 몽골 4편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IV. 人口增加와 增加率

1994년도의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인구학적으로 후기 안정기에 들게 되었다. 한국도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9%라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과 중국은 인구변천기에 깊이 진입했으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몽골과 베트남은 초기 변천기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참조)

지난 1960년대부터 매 10년마다 전세계 각국과 UN의 각 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계인구회의를 개최했다. 1994년에는 카이로에서 수천개의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 약 10,800명이 모여 9월 5일부터 9일간의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의 연구대상 국가들은 카이로 회의에서 각 국가의 인구정책 특히 인구증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UNESCAP, Population Headliners, No.235).

表1 中央人口數, 粗出生率, 粗死亡率 및 人口增加率, 1994

국명	연말인구수 (천명)	조출생율 (천명당)	조사망율 (천명당)	인구증가율 (%)
몽골	2,432	33	8	2.6
베트남	72,342	29	8	2.0
중국	1,222,017	20	7	1.3
북한	23,491	23	5	1.8
한국	44,453	15	6	0.9
일본	125,017	10	7	0.3

자료: UN ESCAP, 1994, Population Data Sheet (Bangkok, 1994)

중국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대표한 中國國歌計劃生育委員會 위원장 썩(Peng Peiyun)여사(장관)는

“인구문제의 핵심은 발전이며 국가마다 경제발전의 수준과 문화적 배경 및 역사적 전통이 다르듯이 인구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국은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과 인구상황에 따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제를 선정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엄청난 인구규모와 불충분한 가경농지, 빈약한 경제기반, 자연자원의 결핍 그리고 각 지역별 경제·사회발전의 불균형 등 산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만 12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14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인구증가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12억의 인구

가 식량과 피복이 부족하게 되고 전세계는 난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전세계 인구의 안정화와 인류의 평화와 발전 및 협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몽골 :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몽고의 다슈제벡(Dashzeveg) 보건부 차관은

“몽골은 인구 220만 밀도 km^2 당 1.4인으로서 (1994년 현재) 1970년대 중반 인구증가율은 3.2%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2.0%로 낮아졌다. 몽골은 인구증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간격, 수태연령, 모자보건 및 모성 및 영유아사망율의 감소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몽골은 유산을 합법화했다. 인공유산의 합법화로 불법적인 유산과 그 결과 후유증 등은 현격하게 감소했으나 인공유산율이 증가했으며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대해 몽골은 원하지 않는 수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기혼부부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인공유산율을 저하시키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 : 베트남의 인구 및 가족계획부 키(Mai Ky)장관은

“베트남의 인구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인구 조절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한 해에 2000만 달러를 할당했다. 이것은 2년 전인 1992년에 비해 8배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었다. 이 예산은 전임 가족계획요원의 배치를 주로 공사(Commune)별로 하기 위한 것이며 1995년부터는 요원의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도 대량모집 배치할 예정”

임을 밝혔다.

북한 : 북한대표 장성길은

“북한 인구정책의 기본은 인간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과 공중보건을 다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의료시설의 무료이용과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을 국비로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장대표의 주장은 북한에는 인구는 물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 출산력의 저하와 인구증가율의 감소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한국의 장래 인구정책은 주목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인구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성취한 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1960년의 총출산율 6.0에서 1990년에는 1.6으로 저하됐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인구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문제의 내용이 바뀐 것이다. 공업화는 도시화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수반했다. 1960년 도시인구 28%에서 1990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80%가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국제협력처 등을 통해 인구정책과 경제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계속해서 UN의 여러 기구와 조직을 통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제 이 회의는 새로운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며 과거 우리가 해낸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 : 일본의 고노 요헤이 외상은

“인구문제는 점점 더 다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으며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실행이 긴급히 요구된다. ICPD(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는 금세기 가장 중요한 국제 회의가 되었고 인구증가는 지속적인 발전과 지구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에 일본은 인구와 AIDS(에이즈)문제를 위해 30억불을 지출하기로 결정”

했음을 밝혔다.

V. 出産力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구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수단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사망율의 감소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 그러나 출산력의 감소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인 경우가 드물다. 다만 높은 인구성장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表2>에서 제시한 총출생율(Total Fertility Rate)은 1994년 1년간 각세에서 가임연령층(15-49세) 여성들이 실제 출산한 비율로 출산한다면 일인당 평균 갖게 되는 자녀수를 말한다. 몽골과 베트남의 경우 전통적인 높은 출산율(6-7명)보다는 낮아졌으나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높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이들 두나라의 인구는 30여년에 2배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수치는 빠른 시일내에 도저히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의미한다.

몽골의 경우 인구수가 최소화여 출산율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表2 總出生率, 幼兒死亡率 및 출생시 平均壽命, 1994

국명	총출산율	유아사망율 (천명당)	출생시 平均수명	
			남자	여자
몽골	4.5	58	63	66
베트남	3.8	35	62	67
중국	2.2	26	70	73
북한	2.3	24	68	74
한국	1.6	15	69	76
일본	1.5	4	76	82

자료: 表1과 같음

않고 있다. 몽골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절대인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인구를 200만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네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낙태를 금지시켰고, 다섯 자녀 이상을 낳는 女人에게는 훈장을 주는 등 다산을 권장하고 산모는 물론 남편까지 출산휴가를 주고 탁아비와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몽골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29-30).

베트남의 경우 89년이후 출생을 억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같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못했으나 정부의 정책과 의지는 매우 결연하다. 베트남의 경우 북베트남에서는 1975년 통일 이전에 이미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남베트남의 경우 전쟁의 피해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겨를이 없었다 (具成烈 편저, 1993, pp.6-7).

중국은 광대한 국가이므로 출생율도 지역간의 차이가 크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각 省別, 地域別 표준화된 지수(예컨대 총출생율)를 구할 수 없으나 1994년 홍콩과 대만의 경우 총출생율은 각각 1.6과 1.7로서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2>에 제시한 중국전체의 2.2란 숫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전세계 인구의 4.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가 거의 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구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중공정권 수립이후 시작된 중국의 출산억제정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3-54년간에 실시한 최초의 센서스결과에 외부세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고 출산억제방침을 정하고 1956년부터 자발적인 만혼과 출산제한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뒤이은 모택동의 文化革命에 의해 산아제한운동은 중단된다. 1962년부터 71년까지의 10년간 공식적인 정책발표는 없었으나 인구조절의 상징인 팰더스이론을 비판하는 견해가 지배했다. 모택동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생각도 많고 따라서 열성과 자원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 예컨대 北京大學長이었던 馬寅初는 중국 인구증가가 자본축적에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다가 실각했다 (Aird, 1972).

197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인구정책은 강력한 인구조절 정책으로 선회한다. 당시 이론적 뒷받침은 이른바 레닌의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의 관점이었다. 1974년 세계인구회의에서 중국대표는 실업, 빈곤, 기아와 높은 사망율은 인구과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패권주의에서 기인된다고 주장하고 인구정책은 전적으로 각 국가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는 국내문제로서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것은 1994년 세계인구 및 발전대회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그 내용이 1994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이며 세계

평화 및 공존지향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70년대 중국의 인구정책은 한마디로 “더 늦게, 더 길게, 더 적게”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즉 결혼은 더 늦게, 자녀의 출산간격은 더 길게, 그리고 총자녀수는 더 적게라는 뜻이다. 이와같은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혼인연령을 법적으로 제정했으나 도시와 농촌, 한족과 소수민족 등에게는 다르게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출산간격은 5년, 자녀수는 도시에서는 2명·농촌에서는 3명을 이상적인 수로 제시했다. 그 결과 총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964년 6.1명에서 1970년 5.7명, 81년에는 2.7명으로 감소했다. 1981년의 총출생율 2.7명은 인구구조가 젊지 않을 경우 그다지 높은 율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구조는 대단히 젊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1981년부터 중국은 한 자녀갓기운동을 전개하여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출생수 감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뒤의 인구구조에서 말할 성비불균형의 문제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981년 2.7명에서 1994년 2.2명으로의 저하는 대단한 성공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경우 1994년 총출산율 2.3명이란 숫자는 전통적인 고출산율인 6-7명에서 약 1/3로 저하된 낮은 수준이다. 남한의 총출산율 1.6명은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력으로서 사망율에 변화가 없이 이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30여년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Eberstadt, 1990 ; 박상태, 1991 ; 정기원, 1993 ; 김두섭, 1993)를 중심으로 북한의 출산력에 관한 정책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까지 남·북한은 모두 전통적인 높은 출산율인 6명의 총출산력을 보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1970년에 이르러 4.5명으로 감소하고 80년에 2.7, 90년에 1.6으로 감소했으나 북한은 1970년까지 6명 이상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75년에 3.9명으로 갑자기 저하되고

80년에 3.0, 85년에 2.6, 90년에 2.5, 94년에 2.3으로 감소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남한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었으며 피임방법과 도구도 널리 보급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농어촌주민을 가족계획사업의 주대상으로 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도시주민도 포함되었고 1980년부터는 출산력이 높은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접근까지 시도했다. 홍보 슬로건도 3자녀갖기운동에서 1자녀갖기운동으로 전환되고 이를 위한 재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교육수준의 상승,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참여 등 다른 사회경제적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은 위의 조건중 대부분이 충족되어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를 경험했다.

북한의 인구정책은 1970년이전에는 출산장려 내지 출산방관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두섭, 1993, p.223). 그러나 1970년 6.0 이상의 높은 총출생율에서 1975년 3.9명으로 저하된 것은 소극적인 가족계획 정책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출산력이 1970년 6-7명에서 80년 3명으로 저하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기혼부부의 광범한 피임방법의 보급과 강력한 초혼연령의 제한, 그리고 양곡배급등의 차등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북한에서 출산억제를 범국민적으로 권장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북한 인구연구소장인 홍순원의 발표에 나타나 있다. 1990년 북한 정부는 조선인구 및 모자보건협회를 전국적 규모로 결성했다. 이 협회는 자발적 사회단체로서 전국 대중에게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모자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들과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구·자원·환경간의 적절한 균형에 있음을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

다. 유배우 부부에게 피임기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전파하고 이 방면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인구와 모자보건관련 국제기관과 비정부기관과의 상호협력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Population Headliners, No.190, 1991, p.3).

VI. 死亡力

사망율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6개국은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 평균수명이 베트남과 더불어 가장 낮은 몽골의 경우 유아사망율이 인구 1000명당 58명이었다. 영아사망율은 사망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된다. 몽골의 보건후생시설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고출산율을 지향하고 실제 높은 출산율로 인해 아직도 높은 영아사망율을 보여주고 있다.

몽골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영아사망율(생후 1년간의 사망율)은 천명당 76에서 88년 64, 91년 63, 그리고 UN에 보고된 58명으로 지난 9년간 25% 이상이 감소되었다 (1993, 몽골편람, p.79). 이것은 대단히 급속한 저하속도다.

베트남은 1979년과 1989년 두 차례 실시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생명표 추계모형에 따라 평균수명을 추정한 결과 88-89년 베트남 인구의 출생시 평균수명은 남자 63세, 여자 68세였다. 이것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기대수명이며 사망자녀의 보고누락에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표2>에 제시한 숫자는 UN에서 다시 수정한 1994년도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이다. 베트남 인구의 평균수명은 중국이나 남·북한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 특히 라오스·캄보디아동보다는 월등히 높다.

베트남의 높은 출산력은 몽골에서와 같이 높은 영아사망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천명당 35명이란 영아사망율은 일본이나 남·북한, 중국에 비해 높은 율이지만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100명내외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보고누락의 결과를 참작하면 실제 영아사망율은 35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베트남이 전후 20년간 인구학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 해방 당시 중국인구의 평균수명은 35세였다. 45년후인 1994년 중국의 평균수명은 71-72세로서 두배 이상이 증가했다. 영아사망율은 1949년 출생아 천명당 200명에서 26명으로 저하했다. 평균수명 연장에서 영아사망율의 역할이 대단히 컸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중국은 광대한 지역이므로 지역간의 차이 특히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발전된 지역과 저개발된 지역간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평균수명 연장은 1949년 35세, 1950년 68세, 1994년 71-72세로서 처음 32년에 33년이 증가했으나 다음 14년간에 3-4년 연장에 그쳤다. 1980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말리리아·티부스·마마·성병 등 전염성·기생충성 질환을 완전히 퇴치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거국적 보건의료시설의 확충등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결과이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망율 감소는 단시일내에 이룩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북한의 평균수명은 1994년 현재 거의 남한을 육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0년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생산과 분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했다. 토지개혁과 공중보건시설의 확충은 생활수준이 낮은 기층민중의 생활수준 개선에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상태, 1991, pp.33-36).

남한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경제발전의 속도가 북한보다 대단히 빨랐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발전은 남한을 능가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리한 조건 아래서도 북한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 49세, 1970년 59세로서 남한의 55.3, 63.2세에 비해 낮았

다. 1970년대부터 남한의 발전은 북한을 앞지르고 높은 국민소득을 향유했으나 1980년과 1990년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1980년 남북한 66세; 1990년 북한 69세, 남한 71.3세). 1950년대와 1960년대 남한은 경제발전이 뒤졌음에도 의약품의 수입과 공중보건시설의 확충으로 사망율이 현격히 감소했다.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공중보건과 분배구조의 개선만으로도 평균수명을 70세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VII. 年 齡 및 性 構 造

1) 年 齡 構 造

인구의 연령구조는 물론 출생율과 사망율의 혼합된 결과이다. 몽골 인구는 0-14세가 40%를 차지하여 대단히 젊다. 베트남도 37%로서 젊지만 몽골보다는 낫다. 이것은 몽골의 출생율이 베트남보다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0-1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30%가 넘을 때 그 인구는 급속히 팽창하는 팽창형임을 보여준다. 20-29%의 경우 후기팽창형 또는 초기 안정형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0-14세 인구가 20%미만일 때 그 인구는 후기안정형 또는 인구감소의 쇠퇴형임을 알 수 있다.

몽골과 베트남은 팽창형의 인구이며 중국과 북한은 후기팽창형, 한국은 초기안정형, 일본은 쇠퇴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몽골과 베트남은 부양비가 높고 중국과 북한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노년인구의 증가로 한국보다 높은 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의 0-14세 인구는 20년후 20-34세의 초기 노동인구를 의미한다. 베트남의 2700만, 중국의 3억3천만이라는 거대한 노동력은 이 지

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3 東아시아 六個國의 年齡構成比 및 年齡別 人口數, 1994

국명	연령별 인구 (%)			연령별 인구수(1000명당)			부양비
	0 - 14	15 - 59	60+	0 - 14	15 - 59	60+	
몽골	40	55	5	974	1,339	122	84
베트남	37	57	7	26,767	41,235	5,064	81
중국	27	64	9	329,945	782,091	109,982	58
북한	29	64	7	6,812	15,034	1,644	56
한국	24	68	8	10,669	30,228	3,556	49
일본	17	64	19	21,252	80,011	23,753	57

자료: 表1과 같음

2) 性構造

대체로 인구가 젊으면 그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높다. 이것은 출생시 성비가 105-108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령구조와 마찬가지로 성구조는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베트남과 북한인구의 성비가 낮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1945-75년간 30년 전쟁의 결과 남자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1946-54년간의 對 프랑스전쟁, 1965-75년간의 對 미국전쟁, 1979년의 對 캄보디아전쟁에 따른 남성사망의 과다로 인한 것이었다.

表4 東아시아 五個國의 性構成, 1990

국명	남자 (천명)	여자 (천명)	성비 (남자/여자×100)
몽골(1)	1,072	1,077	99.5
베트남(2)	31,450	32,277	97.4
중국(3)	589,040	554,290	106.6
북한(4)	10,570	10,842	97.5
한국(5)	21,573	21,296	101.3

자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편람, 1993, 31쪽

(2) " , 베트남편람, 1992, 39쪽

(3) " , 중국편람, 1994, 39쪽

(4) Eberstadt and Banister, 1990.

(5)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및 인구추계, 1991.

북한의 경우 해방 후 6.25 전쟁, 남한으로의 남성인구 유출, 전쟁에 의한 피해등의 구조적 요인이 아직까지도 전체인구의 성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인구구조가 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비가 높다. 이것은 남아선호에 의한 인구변동의 축적적인 결과이다. 중국인구의 전문가인 Coale과 Banister는 과거 중국인구를 살펴 본 후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출생시 성비가 높았고 여아영아의 사망율이 남아보다 훨씬 높았던 것은 전통적인 여아영아살해의 결과로 추론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국인구의 출생시 성비는 106 전후로서 정상을 되찾았다.

이것은 중국정부 수립 후 정부의 영아살해 근절정책의 영향으로 보았다 (Coale and Banister, 1994). 그러나 다시 1980년대 특히 1980년대 후반기 중국의 출생시 성비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4년 출생시 성비는 108을 초과하고 그후 111에서 116까지의 높은 율을 유지하고 있다 (Gu and Roy, 1994, p.19).

이와같은 현상은 중국 본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중국·대만·홍콩 등 4개 국가지역의 성비변화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생시 성비가 두드러지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1985년, 중국이 1986년, 대만이 1987년이였다. 각각 서로 다른 인구변화 과정을 겪은 세 나라에서 이와같은 현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朴在彬·趙南勳, 1994).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짧은 기간 내에 출산력이 6-7명에서 2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출생시 성비는 도시에서보다는 농촌에서 높아지고 있다. 1989년 市の 경우 109였으나 鎮과 鄉의 경우 112였다. 물론 省別 차이도 컸다 (Gu and Roy, pp.21-23). 대만과 특히 한국의 경우 1990년 출생시 성비는 농촌에서보다는 도시에서 훨씬 높았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경상북도 대구지역이 가장 높아 도시의 크기보다는 지역간의 차이가 더 컸다. 중국과 한국 모두 자녀의 출생순위가 2명 이하일 때의 성비는 정상이었으나 출생순위 3명 이상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대만에서의 1965-90년간 가족계획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존 남아수가 많을수록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고 피임실행율이 높았다.

중국의 경우 1세미만 남아초과 현상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여아의 棄兒와 여아영아살해도 과거에는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전체 출생아수의 제한에 주력했던 인구정책은 이제 총자녀

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성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이것은 문화적 가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뒤에 언급할 여성차별의 구조적인 장애를 개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출산연령에 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사망율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여성들의 자녀출산 평균연령이 20세인 경우와 40세인 경우, 같은 숫자의 평균자녀를 갖는다고 해도 인구증가율은 20세의 경우가 40세의 경우보다 2배가 높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VIII. 都市化

도시에 대한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변천하므로 여러 나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국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몽골은 다른 인구변천과정에 비해 도시화율(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와 그 증가율)이 대단히 높다. 특히 도시인구증가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다. 몽골인구의 59%가 1994년 3대자치시와 지방행정 중심지에 거주하고 있다. 1991년 자료에 의하면 수도 울란바타르에만 전체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큰 首位比로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공업과 산업이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은 유목을 주로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고비사막지역의 인구가 1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몽골의 지방행정 중심지는 그 성격이 도시와 농촌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목축과 같은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시기에 는 도시라 불리우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

表5 東아시아 六個國의 人口密度, 都市人口比 및 都市人口 增加率

국명	인구밀도	도시인구	
	(km ² 당)	%	연평균 증가율(%)
몽골	2	59	3.6
베트남	218	20	2.9
중국	127	28	4.3
북한	195	60	2.4
한국	449	74	2.3
일본	331	78	0.6

자료: 表1과 같음.

서 몽골의 도시는 다른 지역의 도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도시인구비는 다른 사회경제·인구학적 발전정도에 걸맞지 않을 수 있다.

베트남은 다른 인구 발전정도에 걸맞는 도시인구비인 1994년 기준 20%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인구비는 우리의 연구대상국 중 가장 낮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도시인구비는 일부 동남아시아 저개발지역보다는 높다. 오랜 전쟁 후 1975년 남북이 통일된 베트남은 그 후 전후복구사업과 경제부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6년부터 도이모이(刷新) 정책을 채택하여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시인구비는 가까운 장래에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가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태, 1994).

1970년대초 중국이 부분적으로 개방을 시작할 때까지 중국의 인구자료 특히 지역별 인구자료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계하거나 추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전세계 인구를 구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도시인구는 1960-70년대의 下放 (return to rural areas)에 이어 1980-90년대의 盲流 (blind migration) 등 대단히 큰 기복을 겪으며 성장했다. 1950년 이래 중국 정부는 도시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견줄 수 없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 빈곤문제는 개발에 따르는 부산물일 수 밖에 없다는 종래의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치밀한 국가의 계획에 의해 도시 과잉인구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경험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 (Ebanks and Cheng, 1990). 그러나 중국의 도시인구 억제정책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도시인구 下放은 소위 과잉농촌화(Over-ruralization)란 새로운 현상을 낳기도 했다. 즉 생산성이 낮은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농촌에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말한다. 더구나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盲流현상은 무작정 向都離農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도시인구 과잉현상의 시초를 재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이다.

한국도 1950년 이후 1990년대까지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가 역전되어 농촌 위주의 사회에서 도시 위주의 사회가 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경우도 초기에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도시"개념은 남한과 다르다. 남한의 경우 인구 5만 이상의 읍이나 면 지역을 도시적 성격구비의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승격시키면 시가 된다. 북한에도 "시"가 있으나 북한 자료에서의 "도시지역"이란 공업생산 노동자 3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므로 남한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1953년 17.7%

에 불과했던 도시인구는 1960년에 40.6%로 증가했다. 그리고 1970년 54.2%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이후 증가의 속도가 완만하여 1980년 56.9%, 1995년 60%로 추계되었다.

남한의 경우 1950년 북한과 비슷한 17.2%였다가 1960년 28%, 1970년 41.1%가 되고 80년 57.3%, 그리고 1994년 74%로 추계되었다 (박상태, 1991).

남한의 도시인구비는 계속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북한의 도시인구비는 1950년부터 7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도시인구의 연령별·성별 인구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속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이 70년까지 급격히 향상되다가 그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낮아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도시인구의 연령구성이 농촌보다 젊기에 도시 내에서의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율도 큰 몫을 차지했겠으나 계속되는 비농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지역의 도시승격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용력(capacity)이 커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1960年代 UN에서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UN, 1973, pp.95-96). 이 연구에 의하면 후진국의 고출산·고사망의 인구가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득수준의 상승, 비농업 종사자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도시화를 주요지수로 들고 있다. 출산력의 경우 일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룩되기 전까지는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으며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급격하게 저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入口假說이라고 한다.

도시화의 경우 전통적인 6명 이상의 자녀에서 5명으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20% 전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5명 이하로 떨어진 경우 3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었다. 우리의 연구대상 인구

들은 모두 도시인구비가 20%가 넘어 위의 가설을 증명해 주고 있다.

IX. 人口와 發展

앞서 살펴 본 도시화와 더불어 산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은 오랜 동안 인구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수로 지적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위와같은 전체국민에 대한 지표 못

表6 東아시아 六個國의 成人文字解讀率, 平均修學年數, 人當國民所得 및 産業別 勞動力 人口比

국가	성인문자	평균수학	인당국민소득	산업별종사		
	해독율(%)1)	연수(년)2)	구매력기준(US \$)1)	노동력인구비(%)3)		
	1992	1992	1990-92	1차	2차	3차
				90-92	90-92	90-92
몽골	81.1	7.2	2,389	40	21	39
베트남	91.9	4.9	1,010	67	12	21
중국	79.3	5.0	1,950	73	14	13
북한	95.0	6.0	3,026	43	30	27
한국	97.4	9.3	9,250	17	36	47
일본	99.0	10.8	20,520	7	34	59

자료: 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New York:Oxford Univ. Press, 1995), pp.155-157.

2) UNDP, HDR 1994, pp.129-131.

3) UNDP, HDR 1995, pp.176-177 및 p.201.

지 않게 여성의 교육수준, 노동력참여율 및 지위향상이 인구발전에 필수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1) 교육수준과 산업화

表6에 제시된 바와같이 동아시아지역의 성인(15세이상) 문자해독율은 구미공업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과 북한은 1994년 95%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과 몽골은 80% 내외로서 계속 향상일로에 있다. 베트남의 경우 92%로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문자해독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양질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수학연수를 보면 한국은 9.3년으로 일본에 가까우며 북한과 몽골은 6-7년으로 지난 수십년간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시해 왔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5년 내외로서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지만 대부분의 남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이 평균 2년 미만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UNDP, 1994, pp.129-131).

교육수준의 향상은 농업인구의 비율을 낮추고 산업화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강화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위주의 사회로서 1차 산업에의 종사인구가 각각 73%,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농업인구 48%는 물론 개발도상국 평균 58%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다. 몽골은 유목민족이기에 특수한 경우이겠으나 북한의 농업인구 43%는 북한이 산업화에 깊이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농업인구 17%는 일본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율이지만 선진국 평균 10%보다는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은 1인당 GNP나 GDP보다는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이므로 구매력기준의 1인당 소득(PPP)지수를 이용했다. 소득수준은 평균

수학연수와 正의 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농업인구비와는 逆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表6참조). 즉 수학연수가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높고 농업인구비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았다.

2) 女性의 地位와 人口

여성의 지위와 인구는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인구증가율과 높은 출산력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저해요인이 된다. 제한된 물적·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와 인구와의 관계는 방법론적으로 두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거시적인 방법과 자료로만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간의 차이, 빈부간의 차이, 도시·농촌간의 차이를 포함한 지역간의 차이, 인종이나 종교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이들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더 커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며, 장소에 따라 심각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에 말한 것 중 빈부·지역·도농·인종·종교·세대간의 차이는 사회전체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 방법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고 개인적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의 남녀성간의 차이는 사회전체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밖에 없다. 즉 출산력에 대한 개인적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빈부간의 차이를 볼 수는 있으나 남자와 여자를 떼어 출산력을 측정하여 성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성차이 이외의 것들은 거시적인 방법의 오류를 미시적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고 미시적인 방법의 단점을 거시적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으나 性間의 차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男女性間의 차이연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의 지위와 인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인과관계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호교대적인 대응관계이기 때문이다. 출산력이 저하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그만큼 부양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용력이 커짐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참여율도 증가하고 동시에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력 참여율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출산력이 낮아지고 사망율도 저하된다. 이상적으로는 두개의 방향을 모두 검토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후자에 맞추기로 한다.

가) 女性의 教育水準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편의 교육수준보다 출산력의 변화와 더 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여성의 교육은 혼인과 출산을 연기시키고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실행율을 높인다. 또한 혼전취업율을 높여 가족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지위를 강화시킨다.

한국의 출산력 저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예에 의하면 초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력은 무학보다 출산력이 7.9% 낮으며, 중등교육을 받았을 경우 14.2%, 고등교육 즉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력은 중등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16.3%가 낮았다 (Lee and Cho, 1986). 사망력에 있어서도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본인은 물론 자녀와 다른 가족성원에 대한 보건·의료·영양 등에 관한 지식의 차

이를 통해 영아사망율·모성사망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몽골의 여성 성인 문자해독율은 베트남과 한국에 비해 낮지만 후진국 전체(59%)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다. 對남성문자해독율의 비도 중국과 몽골의 경우 각각 79와 86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93, 97에 비해 낮으나 이것은 몽골과 중국에 있어 2차대전 이전의 출생자들인 50대이상의 여성문맹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表7참조).

1990년 각급학교 재학생들의 남성에 대한 여성비를 보면 몽골과 중국 특히 몽골 여성의 교육수준은 가까운 장래에 남성과 비슷해지거나

表7 東아시아 六個國의 女性成人文字解讀率, 對男性比, 및 各級學校 在學生의 對男性比

국명	여성성인문자해독율	대남성비율	각급학교 재학생여성비		
	(%)1)	(%)1)	(남성=100)2)		
	1992년	1992년	1990년		
			초등	중고등	대학이상
몽골	74.8	86	106	111	140
베트남	88.7	93	101	95	52
중국	69.9	79	95	78	75
북한3)	-	-	-	-	-
한국	95.8	97	100	97	53
일본	- 4)	- 4)	100	102	66

자료: 1) UNDP, HDR 1995, pp.51-53.

2) 위의 책, pp.66-68.

3) 자료없음.

4) 100%에 가까우므로 제시하지 않음.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선진국인 일본까지도 여성의 고등교육(대학이상) 취학율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 후진적이다.

나) 女性의 勞動力 參與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혼인의 연기, 교육수준 및 가족계획실행율을 높임으로써 출산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업화된 선진국의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에 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관계가 약하거나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다.

선진국에서도 농촌에서보다는 도시에서 이 관계가 뚜렷하며 고용의 형태에 따라 산업부문에 따라 그 관계가 다양하며 특히 취업과 모성의 역할이 동시에 가능한가의 여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후진국 농촌의 경우 여성의 취업여부는 출산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UN, 1973, p.303 ; UN, 1975, p.370).

表8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동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평균인 35%보다 모두 높았으나 오직 한국만이 34%로서 세계평균을 밑돌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도 모두 세계평균은 물론 후진국평균을 넘어 높은 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만이 41%로서 세계평균(선진국 46% ; 후진국 50%)을 못미치고 있다. 전체수입 중 여성이 공헌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더욱 낮아 22%에 불과했다.

동아시아의 여성이 노동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노동력 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도 기

表8 女性勞働力の 比, 女性の 勞働力 參與率 및 全體收入中 女性 勞働力の 收入

국명	여성노동력의	여성의 노동력	전체수입중
	비율(%)1)	참여율(%)1)	여성노동력의 수입(%)2)
	1994	1994	(1990-94)
몽골	45	72	-
베트남	47	69	-
중국	43	70	31.2
북한	46	66	38.7
한국	34	41	22.0
일본	39	50	33.5

자료: 1) UNDP, HDR 1995, pp.57-59 및 pp.176-177.

2) 위의 책, pp.84-85.

인하겠으나 동아시아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노동력은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이란 점에서 자발적인 노동력 참여율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제적이건 자발적이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북한·몽골·베트남의 인구정책 중 여성노동력에 관한 정책은 여성노동력의 활용이란 점에서 한국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女性의 地位點數

UNDP는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GEM(여성지위점수)을 만들었다. 이 지수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생략하겠으나 우리의 관심은 동아시아 대상국가들이 보여주는 UN의 기준에 따른 상대적 순위에 있다. GEM은 각국을 단위로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정도와 사회경제적 참여정도 및 여성노동력이 창출한 국민소득에서의 비율등 세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남성과 같을 경우를 1.0으로 했다 (UNDP, 1995, pp.132-133, Technical Note참조).

表9 女性의 地位點數 및 主要職業에서의 女性從事者 比率(%)

국명	여성 GEM지위점수	여성종사자 비율, 1994			116개국중 순위, 1992
	1992	국회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몽골	-	-	-	-	-
베트남	-	-	-	-	-
중국	0.474	21.0	11.6	45.1	23
북한	0.380	20.1	3.7	24.6	50
한국	0.255	1.0	4.1	42.5	90
일본	0.442	6.7	8.0	42.0	27

자료: UNDP, HDR 1995, pp.84-85.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나라는 Sweden으로서 0.7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아프카니스탄으로서 0.111점을 나타냈다. 몽골과 베트남

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중국과 남북한 및 일본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은 0.474로서 가장 높고 다음 일본, 북한 그리고 남한의 순으로 나왔다 (表9참조). 116개국중 중국은 여성지위 면에서 23위를 차지하여 일본의 27위를 앞섰으며 북한도 5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한은 90위로서 회교국가들과 인도등 일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수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 뒤져 있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한 한국은 최후진국에 속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의 방향설정에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성에 관한 정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X. 結 論

세계 제2차대전 후 지난 50여년간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 변화의 템포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달랐으나 동아시아가 가장 급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변화 한가지만 가지고도 분명해진다.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고출산·고사망의 사회에서 탈피한 지 오래되어 일본·한국·북한 및 중국의 일부는 이미 저출산·저사망의 사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몽골·남한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먼저 인구증가, 출산력, 사망력, 성구조, 연령구조, 도시화 등 人口內的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교육수준, 산업화, 여성의 지위등 人口外的인 요인들의 현황을 알아 보았다.

인구폭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대응과 각국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형성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은 전세계가 당면한 공동과제중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그러므로 국제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1994년 9월 5-13일간 Cairo에서 개최된 ICPD에서 설정한 2015년까지의 20년간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에서도 인구수의 전례없는 증가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공동대응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빈곤, 특히 농촌의 빈곤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전인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농촌개발등의 정책적 배려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와 사회발전간의 관계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여성의 지위가 높고 그 반대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낮다. 인구정책은 여성의 대표권과 정책참여에서의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지만 특히 여성의 교육과 저개발지역에서의 가족계획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토지소유, 경작권, 금융 및 보험 등에서의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

위와같은 범세계적 노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무수히 많다. 가장 큰 장애요소는 첫째, 국가라는 장벽과 국가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자주성과 국내에서의 지역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국가이기주의는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구조화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인종 및 민족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냉전체제의 붕괴는 지난 수백년간 제국주의적 발전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워주고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국제적 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크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다. 이 중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냉전체제 붕괴 후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넓은 의미의 가치관의 대립은 여전히 특이 종교적 갈등은 동구와 이슬람지역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인종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민족간의 갈등은 계속 남아있으며 국가이기주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악조건은 역사적·문화적 공통성과 친근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과 한국의 인구발전 경험과 시행착오는 북한과 중국의 인구정책의 수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며, 몽골과 베트남은 일본, 중국, 한국등의 다양한 인구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과 인구구조의 특성은 이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며 이런 뜻에서 동아시아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상호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文

- 具成烈 編著,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전망 (서울: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 1993).
- 金斗燮, “韓半島의 人口變遷, 1910-1990:南北韓의 比較”, 統一問題研究 (統一院), 第5輯 4號(1993 겨울), 202-235.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北方地域센터, 베트남便覽 (서울:KIEP, 1992).
- _____, 몽골便覽 (서울:KIEP, 1993).
- _____, 中國便覽 (서울:KIEP, 1994).
- 朴商台, “北韓人口의 構造와 變化”, 東亞研究 (西江大 東亞研究所), 第22輯 (1991年 6月) 21-53.
- _____, “베트남의 人口構造와 變化”,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편, 분단국 통합사례연구, 1994년 12월, 99-103.
- 朴在彬·趙南勳, “韓國의 性選好와 性比不均衡實態分析”, 韓國人口學會誌, 第17卷 第1號(1994年 6月), 87-114.
- 鄭基源, “北韓의 人口現況과 展望”, 韓國人口學會誌, 第十六卷, 第一號(1993年 6月), 1-18.
- 統計廳, 1990人口住宅總調查結果 및 人口推計, 1991年 4月.

英文

- Aird, John S.,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Prosp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 N.I.H. Reprint, 1972.
- Coale, Ansley J. and Judith Banister, “Five Decades of Missing Females in China”, Demography, Vol.31, No.3 (1994), pp.459-479.

- Ebanks, G. Edward and Chaoze Cheng, "China: A Unique Urbanization Model", i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Vol.5, No.3 (Sept.1990), pp.29-50.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990.
- Gu, Baochang and Krishna Roy, "Sex Ratio at Birth in China, with Reference to Other Areas in East Asia", i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Vol.10, No.3 (Sept. 1995), pp.17-42.
- IESS(International Encyclopedia for the Social Scienc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79).
- Kuroda, Toshio, "Demographic Transi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in East Asia",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APEC에 관한 韓·日·中 3國의 展望, 慶熙大學校 國際共同學術會議發表論文集, 1994年 10月, pp.57-69.
- Lee, Hyo-Chai and Hyoung Cho, "Fertility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Recent Empirical Findings in Fertility in Korea, et.al.(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1986).
- UN,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 1973).
- UN, "Women Rights and Fertility", in UN, The Population Debate, World Population Conference Papers, Bucharest, 1974.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UN, ESCAP,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Vol.10, No.4 (Dec. 1995).

UN, ESCAP, Population Headliners, No.190 (1991); No.234 (1994); No.235 (1994).

UN, ESCAP, 1994 ESCAP Population Data Sheet (Bangkok: UN, 1994).